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채 구 목

(원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주체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년실업, 신규대졸자 실업

* 본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청년층 구직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언론매체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은 모든 연령층의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특히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심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2004년 2월 현재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9.1%에 달하고(한겨레, 2004a), 2003년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7.8%에 이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청년층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한국의 청년실업은 6%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그동안 한국경제가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청년실업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 높은 편이고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고 신규대졸자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청년실업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실직에 직면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직면하는 청년실업은 실직 당사자에게 자존감 상실 및 좌절을 경험케 하고, 직장에서의 학습기회를 결여케 하여 개인의 생산잠재력에 손상을 가져다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젊은 시기에 보다 적응성이 높고,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젊은 시기에 형성된 행동 패턴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실업상태는 개인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O'Higgins, 2001: 52). 사회적 측면에서 청년실업은 생산능력이 있는 유흥인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높은 청년실업은 중장기적으로 일정 연령계층의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동력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전재식, 2002: 5-6). 또한 청년실업은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며, 마약·알코올 남용이나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크게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청년층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채택·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제공, 직업능력개발 사업, 취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 특히 신규대졸자 실업 해소에 약간의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입안·추진되지 못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은 통일된 프로그램 없이 부서별로 잡다한 프로그램을 입안·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기간의 실업률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마련에 앞서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해 청년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이

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청년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개념 및 실태

1) 청년실업 및 신규대졸자 실업의 정의

청년실업은 청년과 실업이 결합된 용어이므로 이들 용어를 정의해 봄으로써 청년실업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학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은 없다. 청년에 대한 정의에서 연령상의 상·하한은 각국의 사회문화적·제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하한연령은 법정 최소 학교졸업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상한연령은 대학졸업 연령과 관련이 있다.

UN은 청년을 “15-24세의 젊은이”로 정의하고 있으며(O’Higgins, 2001: 10에서 재인용), OECD나 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15-29세의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15-29세의 연령층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이병희·안주엽, 2001; 채창균, 2001; 이병희, 2003; 최영섭, 2003), 일부 연구에서는 15-24세 연령층 혹은 15-27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남재량, 2002).

이처럼 청년에 대한 연령 정의시 15세를 하한연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상한연령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대학졸업 연령을 고려하여 24세를 상한연령으로 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나 한국의 경우는 대체로 29세를 상한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늦어지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연령별 통계자료들이 5년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군복무기간 3년을 더하여 상한 연령을 27세로 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수 또는 대학재학 중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1-2년 정도 늦어지는 학생이 많고 노동관련 통계자료도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상한연령을 29세로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는 15-29세, 여자의 경우는 15-24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실업에 대한 정의 또한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ILO의 정의에 의하면 “실업자는 조사시점 전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O’Higgins, 2001: 18).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ILO의 정의와 비슷하게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03).¹⁾ 한편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 실업률이 과소하게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휴

1)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대상 기간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며, 실제조사는 다음 주에 실시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실업을 통계는 조사기간 1주간의 구직경험에 의

인구나 구직단념자가 활용되기도 한다. 유희인구는 해당 계층(연령층)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학(attendng school)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숫자로 정의된다.²⁾ 그러나 유희인구 중에는 가사·육아, 심신장애 등 실제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되어 유희화 인구가 과다하게 잡힐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되며,³⁾ 1999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85-2002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유희인구나 구직단념자의 경우 계측상 정확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구직단념자의 경우 1999년 이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정의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자를 “남자 15-29세, 여자 15-24세의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신규대졸자 실업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정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 자료의 특성에 맞추어 신규대졸자 실업을 정의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을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대졸자 실업자를 “각 연도 4월 1일 이전에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상급학교 진학, 취업, 군입대를 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표 1>은 연령계층별 실업률 실태를 나타낸 표이다. 1990년 이후 청년실업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 5-7%를 유지하다가 1998년 13.6%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청년실업률은 7.7%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6년보다 2%정도 높은 편이다.

핵심층(primary labor force)⁴⁾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청년층 실업률÷핵심층 실업률)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4이상이었으나 1998년 2.4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약간 증가하여

해 판단되기 때문에 구직을 계속해 왔더라도 조사기간 1주 동안에 다른 일이 있어 구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실업인구와 실업률이 과소하게 잡히게 된다.

- 2)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육아, 통학, 연로, 기타(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그냥 쉬었음 등)로 지난 일주간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통계청, 2003; 최영섭, 2003: 20-21).
- 3) 구직단념자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기간 현재 취업을 희망하며,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전공·경력 불일치, 임금·근로조건 불일치, 인근에 일거리 없음, 교육·기술·경험 부족, 사용주의 연로·연소 차별, 경험상 일자리 없음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과거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최영섭, 2003: 23).
- 4) 본 연구에서 핵심층은 남자 30-54세, 여자 25-54세의 자로 정의하였다.

2002년 현재 3.3에 이르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률은 핵심층 실업률에 비해 증가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에서 핵심층 실업률을 뺀 차이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6년 3.9-4.0%에서 1998년 7.9%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 감소하여 2002년 현재 5.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률이 핵심층 실업률에 비해 증가율은 낮으나 청년층 실업률과 핵심층 실업률의 차이는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청년층(A)	6.1 (274)	6.0 (296)	6.5 (314)	7.6 (362)	6.4 (305)	5.2 (244)	5.3 (243)	6.4 (290)	13.6 (582)	12.4 (514)	8.7 (358)	8.5 (342)	7.7 (305)
핵심층(B)	1.4 (165)	1.3 (152)	1.3 (162)	1.6 (194)	1.4 (185)	1.3 (166)	1.3 (175)	1.8 (249)	5.7 (803)	5.2 (748)	3.3 (489)	3.0 (450)	2.4 (361)
노년층(C)	0.7 (16)	0.6 (13)	0.6 (14)	0.5 (14)	0.5 (15)	0.7 (21)	0.5 (16)	1.0 (31)	3.4 (106)	3.5 (112)	2.0 (65)	1.6 (53)	1.2 (43)
계	2.5 (455)	2.4 (461)	2.5 (490)	2.9 (570)	2.5 (505)	2.1 (431)	2.0 (434)	2.6 (570)	7.0 (1,491)	6.3 (1,374)	4.1 (912)	3.8 (845)	3.1 (709)
청년층/핵심층 (A+B)	4.3	4.7	4.9	4.9	4.5	4.1	4.1	3.6	2.4	2.4	2.6	2.8	3.3
청년층-핵심층 (A-B)	4.7	4.7	5.2	6.0	5.0	3.9	4.0	4.6	7.9	7.2	5.4	5.5	5.3

주: 1) 청년층은 남자 15-29세, 여자 15-24세이며, 핵심층은 남자 30-54세, 여자 25-54세이고, 노년층은 남녀 모두 54세 이상인 자임.

2) 괄호 안은 실업자 수임.

자료: 통계청, 2003.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 30% 내외를 유지하다가 1998년 36.6%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2년 현재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7.5%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7.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신규대졸자 수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11,000명에서 2002년 166,000명으로 55,000명이나 증가했다. 한편 2003년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7.8%이며 실업자는 175,880명으로, 2002년에 비해 약 1만 명이나 증가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러한 현상은 1995년 대학설립 완화정책에 의해 대졸자가 급증해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실업자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층 대비 신규대졸자 실업률 비율(신규대졸자 실업률÷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5-1996년에 5.1-5.6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증가하여 2002년 현재 3.6에 이르고 있다. 신규대졸자 실업률에서 청년층 실업률을 뺀 차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1.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0%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 낮아져 2002년 현재 19.8%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약간 낮아졌다. 한편 핵심층 대비 신규대졸자 실업률 비율(신규대졸자 실업률÷핵심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20이상이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4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증가하여 2002년 현재 11.5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핵심층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규대졸자 실업률에서 핵심층 실업률을 뺀 차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5.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0.9%로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하여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청년층이나 핵심층 실업률에 비해 그 증가율은 낮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 신규대졸자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대졸자(A)	31.3 (89)	28.3 (85)	30.6 (104)	32.8 (116)	32.9 (121)	29.2 (113)	27.0 (111)	28.7 (128)	36.6 (175)	35.1 (180)	29.7 (161)	28.9 (169)	27.5 (166)
청년층(B)	6.1 (274)	6.0 (296)	6.5 (314)	7.6 (362)	6.4 (305)	5.2 (244)	5.3 (243)	6.4 (290)	13.6 (582)	12.4 (514)	8.7 (358)	8.5 (342)	7.7 (305)
핵심층(C)	1.4 (165)	1.3 (152)	1.3 (162)	1.6 (194)	1.4 (185)	1.3 (166)	1.3 (175)	1.8 (249)	5.7 (803)	5.2 (748)	3.3 (489)	3.0 (450)	2.4 (361)
대졸자/청년층 (A+B)	5.1	4.7	4.7	4.3	5.1	5.6	5.1	4.5	2.7	2.8	3.4	3.4	3.6
대졸자-청년층 (A-B)	25.2	22.3	24.1	25.2	26.5	24.0	21.7	22.3	23.0	22.7	21.0	20.4	19.8
대졸자/핵심층 (A+C)	22.4	21.8	23.5	20.5	23.5	22.5	20.8	15.9	6.4	6.8	9.0	9.6	11.5
대졸자-핵심층 (A-C)	29.9	27.0	29.3	31.2	31.5	27.9	25.7	26.9	30.9	29.9	26.4	25.9	25.1

주 1) 신규대졸자 실업자는 각 연도 초(4월 1일 이전)에 졸업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연도 4월 1일 현재 진학, 취업, 입대를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각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를 뺀 수를 해당연도 졸업자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2) 괄호 안은 실업자 수임.

자료: 문교부, 1989-1990; 교육인적자원부, 1991-2003; 통계청, 2003.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을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외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남자는 15-29세, 여자는 15-2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을 제외하면 외국의 청년층 실업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자 전체에 대한 실업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청년층 실업률÷핵심층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6년에는 4.11-4.89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더 높았고,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2년에도 2.37-3.26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OECD 전체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각 국가의 직업교육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이원적 직업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이 낮다(O'Higgins, 2001: 50). 이는 학교-직장 이행체제가 잘 되어 있다는 의미로,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표 3> OECD 주요 국가들의 청년층 실업률

(단위: %)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미국	청년층(A)	11.2	13.3	12.5	12.1	12.0	11.3	10.4	9.9	9.3	10.6	12.0
	핵심층(B)	4.6	5.8	5.0	4.5	4.3	3.9	3.5	3.2	3.1	3.8	4.8
	A/B	2.43	2.29	2.50	2.69	2.79	2.90	2.97	3.09	3.00	2.79	2.50
영국	청년층(A)	10.1	17.3	16.2	15.3	14.7	13.5	12.3	12.3	11.8	10.5	11.0
	핵심층(B)	5.8	8.6	8.3	7.4	7.0	5.9	5.0	4.9	4.4	3.9	4.1
	A/B	1.74	2.01	1.95	2.07	2.10	2.29	2.46	2.51	2.68	2.69	2.68
독일	청년층(A)	4.5	8.2	8.2	8.0	9.3	10.2	9.1	8.6	8.4	8.3	9.7
	핵심층(B)	4.6	8.4	8.0	7.8	8.0	8.9	8.4	7.6	7.0	7.2	8.2
	A/B	0.98	0.98	1.02	1.03	1.16	1.15	1.08	1.13	1.20	1.15	1.18
프랑스	청년층(A)	19.1	24.6	27.5	25.9	26.3	28.1	25.4	26.5	20.7	18.7	20.7
	핵심층(B)	8.0	9.9	11.2	10.5	11.0	11.1	10.8	10.6	9.2	8.1	9.2
	A/B	2.39	2.48	2.46	2.47	2.39	2.53	2.35	2.50	2.25	2.31	2.25
일본	청년층(A)	4.3	5.1	5.5	6.1	6.7	6.6	7.7	9.3	9.2	9.7	10.0
	핵심층(B)	1.6	2.0	2.4	2.6	2.7	2.8	3.4	4.0	4.1	4.4	4.9
	A/B	2.69	2.55	2.29	2.35	2.48	2.36	2.26	2.33	2.24	2.20	2.04
이태리	청년층(A)	31.5	30.6	31.6	32.8	34.1	33.6	33.8	31.1	29.7	27.0	26.3
	핵심층(B)	7.3	6.9	8.6	8.9	9.3	9.6	9.8	9.2	8.5	7.9	7.5
	A/B	4.32	4.43	3.67	3.69	3.67	3.50	3.45	3.38	3.49	3.42	3.51
스웨덴	청년층(A)	4.5	18.4	16.7	15.4	22.5	22.5	16.8	14.2	11.9	11.8	12.8
	핵심층(B)	1.3	7.1	6.9	6.6	8.7	9.2	7.6	6.2	4.9	4.1	4.2
	A/B	3.46	2.59	2.42	2.33	2.59	2.45	2.21	2.29	2.43	2.88	3.05
오스트리아	청년층(A)	-	-	4.8	5.9	6.9	7.6	7.5	5.9	6.3	6.0	7.2
	핵심층(B)	-	-	3.4	4.1	5.1	4.8	5.0	4.5	4.3	3.6	4.5
	A/B	-	-	1.41	1.44	1.35	1.58	1.50	1.31	1.47	1.67	1.60
덴마크	청년층(A)	11.5	14.6	10.2	9.9	10.6	8.1	7.2	10.0	6.7	8.3	7.1
	핵심층(B)	7.9	10.2	7.8	6.2	6.0	4.8	4.6	4.3	4.1	3.5	3.7
	A/B	1.46	1.43	1.31	1.60	1.77	1.69	1.57	2.33	1.63	2.37	1.92
네덜란드	청년층(A)	11.1	9.7	11.3	12.1	11.4	9.7	8.8	7.0	6.6	5.8	5.9
	핵심층(B)	6.7	5.3	6.6	6.4	5.6	4.8	3.7	2.8	2.7	2.1	2.6
	A/B	1.66	1.83	1.71	1.89	2.04	2.02	2.38	2.50	2.44	2.76	2.27
캐나다	청년층(A)	12.4	17.6	16.5	15.6	15.3	16.2	15.1	14.0	12.6	12.8	13.7
	핵심층(B)	7.3	10.0	9.3	8.4	8.7	7.8	7.1	6.4	5.8	6.2	6.6
	A/B	1.70	1.76	1.77	1.86	1.76	2.08	2.13	2.19	2.17	2.06	2.08
호주	청년층(A)	13.2	18.6	16.3	14.4	14.8	15.9	14.5	13.5	12.3	12.7	12.4
	핵심층(B)	5.1	8.5	7.2	6.4	6.8	6.6	6.3	5.4	4.9	5.3	4.7
	A/B	2.59	2.19	2.26	2.25	2.18	2.41	2.30	2.50	2.51	2.40	2.64
OECD전체	청년층(A)	11.7	-	14.2	14.1	19.4	19.0	17.6	12.5	11.8	12.2	13.1
	핵심층(B)	4.8	-	6.6	6.3	8.8	8.6	8.2	5.7	5.3	5.4	6.0
	A/B	2.44	-	2.15	2.24	2.20	2.21	2.15	2.19	2.23	2.26	2.18
한국	청년층(A)	6.1	7.6	6.4	5.2	5.3	6.4	13.6	12.4	8.7	8.5	7.7
	핵심층(B)	1.4	1.6	1.4	1.3	1.3	1.8	5.7	5.2	3.3	3.0	2.4
	A/B	4.30	4.89	4.48	4.13	4.11	3.63	2.38	2.37	2.62	2.83	3.26

주: 한국의 경우 청년층은 남 15-29세, 여 15-24세, 핵심층은 남30-54세, 여 25-54세이며,

OECD 다른 국가들의 경우 청년층은 15-24세, 핵심층은 25-54세임.

자료: OECD, 1995-2003.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의 청년층 및 신규대졸자 실업률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 위기로 급격히 증가한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2% 정도 높은 수준이다. 둘째,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과 핵심층 실업률의 차이는 증가하였다. 셋째,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비슷하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많이 증가하였다. 넷째,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높은 편이다. 특히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이원적 직업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3.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의 원인분석

1) 기존 논의의 검토

청년실업의 증대에 따라 서구 선진국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요인은 노동수요, 노동공급, 청년층 임금,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4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총수요(aggregate demand)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노동에 대한 총수요 감소는 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은 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총수요 변화에 의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기후퇴기에 청년층 실업률은 장년층 실업률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Makeham, 1980; Raffé, 1985). 이는 경기후퇴에 대응한 구조조정 시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해고를 진행시키기 전에 신규채용을 중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적고 직장이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아 경기후퇴기에 장년층보다 자발적 실업이 많다(O'Higgins, 2001: 40-41). 이러한 신규채용 감소와 자발적 실업의 상대적 증가는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진다. 한편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employment elasticity of economic growth)을 들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이 높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일자리 창출력)이 높을수록 총수요가 증가한다.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최근 급격한 기술발달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청년인구의 규모는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즉 노동시장에 청년인구가 많아지면 그들을 고용할 더 많은 일자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청년인구가 많을수록 청년실업이 증가한다(O'Higgins, 2001: 45). 한편 청년인구의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상대적 크기, 즉 핵심층 대비 청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청년층 실업은 증가한다. 코렌만과 뉴마르크(Korenman and Neumark, 1997)는 15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 사항을 분석하여 청년층

인구의 상대적 크기가 10% 증가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5%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셋째, 청년실업은 청년층 임금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청년층 임금이 핵심층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청년층 실업이 증가될 수 있다. 마스덴과 라이언(Marsden and Ryan, 1986)은 핵심층 임금이 청년층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나 산업에서 청년층 실업이 높다는 것을 찾아냈다. 린치와 리차드슨(Lynch and Richardson, 1982) 또한 노동수요가 일정하다면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청년실업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핵심층이 청년층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나, 많은 연구에서 이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층과 핵심층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환경에서 상호 대체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청년층 임금수준은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메이크햄(Makeham, 1980)은 노동의 총수요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청년층 임금수준의 상대적 크기는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블랜치플라워와 프리맨(Blanchflower and Freeman, 1996)은 1990년대 OECD 국가들에서 청년층 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하락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 기간동안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것을 찾아냈다. 한편 최근에는 최저임금제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O'Higgins, 2001: 42). 즉 최저임금이 높게 설정되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 기업이 도산되어 노동수요가 줄고, 이는 청년실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가 청년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식·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학교의 교육내용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해 청년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Levin, 1983). 학교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의 차이로 기업들은 즉시 업무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청년실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명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강조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둘째는 학력수준의 향상, 특히 대졸자 비중의 증가로 신규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학력향상으로 눈높이가 높아져 노동조건이 좋은 일자리는 수요가 부족하고 노동조건이 좋지 못한 일자리는 공급이 부족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구직난을 겪으면서 실업은 증가하게 된다(최영섭, 2003: 37-38).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원인을 1985-2002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변수정의 및 자료수집,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1) 변수정의 및 자료수집

①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률 증가율, ㉢ 신규대졸자 실업률, ㉣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 4가지가 사용되었다. 청년실업률과 신규대졸자 실업률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 증가율

과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변수들이 청년실업 및 신규대졸자 실업 증·감의 원인을 찾는 데 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독립변수에 의해 더 의미 있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MF와 같은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급증한 후 다음 년도에 경제성장 등 독립변수의 요인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하기는 어려우나 실업률 감소율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및 신규대졸자 실업은 앞에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청년실업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신규대졸자 실업에 대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1990년 이전 자료는 『문교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했다. 한편 청년실업률 증가율 및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은 (해당연도 실업률-전연도 실업률)÷전연도 실업률에 의해 구했다.

② 독립변수

가. 노동수요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 GDP 경제성장률과 ㉡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을 사용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한국통계연감』을 통해, 고용증가율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나. 노동공급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는 청년실업 원인분석의 경우와 신규대졸자 원인분석의 경우 각각 다른 변수를 사용하였다. 청년실업 원인분석을 위한 노동공급 변수로는 ㉠ 청년인구 증가율과 ㉡ 핵심층 대비 청년층 인구 비율(청년층 인구÷핵심층 인구)을 사용했으며,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을 위한 노동공급 변수로는 ㉠ 신규대졸자 증가율과 ㉡ 청년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신규대졸자 수÷청년층 인구)을 사용했다.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의 경우 핵심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 대신 청년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을 사용한 이유는 이 비율이 신규대졸자 실업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핵심층 및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신규대졸자 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1990년 이전 자료는 『문교통계연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다. 청년임금

청년임금을 대변하는 변수로 핵심층 대비 청년층 임금 비율(청년층 임금÷핵심층 임금)을 사용하였다. 한편 청년임금을 대변하는 변수로 최저임금제가 많이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⁵⁾ 청년층 임금과 핵심층 임금에 대한 자료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1년 이전 자료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수집했다.

5)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기간에 시간당 2,275원이며, 이를 월임금(226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14,150원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으며 또한 실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17).

라.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학력수준 향상, 특히 대졸자 비중 증가로 인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학교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의 차이로 인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나타내는 변수로 대학진학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의 경우 진학 후 전문대는 2년, 대학은 4년 후에 졸업하므로 평균하여 3년 전 대학진학률을 해당연도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학교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러한 경우 기술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급변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내용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간추세(time trend)가 대체변수로 많이 사용된다(채창균, 2003). 본 연구에서도 학교교육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로 시간추세를 사용하였다.⁶⁾ 대학진학률에 대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했다.

(2) 분석모델

① 청년실업 원인분석

$$Y = a + b_1 EG + b_2 EE + b_3 YI + b_4 YP + b_5 RW + b_6 EU + b_7 TT$$

여기서 Y=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 증가율, EG=경제성장률, EE=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YI=청년인구 증가율, YP=핵심층 대비 청년층 인구 비율, RW=핵심층 대비 청년층 임금 비율, EU=대학진학률, TT=시간추세 이다.

②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Y = a + b_1 EG + b_2 EE + b_3 CG + b_4 CY + b_5 RW + b_6 EU + b_7 TT$$

여기서 Y=신규대졸자 실업률,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 CG=신규대졸자 증가율, CY=청년층 대비 신규대졸자 비율, 나머지 독립변수는 청년실업 원인분석의 경우와 같다.

3) 분석결과

(1) 청년실업 원인 분석결과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독립변수와 청년실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후,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4>의 좌측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이며, 우측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이다. 먼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표 4>의 좌측)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대학진학률 3개 변수가 청년실업률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6) 시간추세가 학교교육 내용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과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적절한 지표를 찾기가 어려워 시간추세를 사용하였다. 한편 시간추세의 변량은 1, 2, 3, ... 또는 연도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였다.

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대학진학률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아지며,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r=-.640$), 대학진학률(.544), 경제성장률(-.485)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표 4>의 우측)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만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청년실업 증가율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r=-.889$),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845)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독립변수와 청년실업률 및 실업률 증가율과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청년실업률		종속변수: 청년실업률 증가율	
	r(상관계수)	p(유의도)	r(상관계수)	p(유의도)
경제성장률	-.485	.041*	-.889	.000***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640	.004**	-.845	.000***
청년인구증가율	-.440	.068	-.362	.140
청년층인구/핵심층인구	-.387	.112	-.101	.690
청년층임금/핵심층임금	-.202	.421	.231	.357
대학진학률	.544	.020*	.054	.831
시간추세	.348	.157	.107	.672

주: * $p<0.05$, ** $p<0.01$, *** $p<0.001$

분석모델에 의해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⁷⁾ <표 5>의 좌측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이며, 우측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이다. 먼저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를 살펴보면, 7개의 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청년실업률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01$), 청년실업률을 예측하는데 81.0%(R^2)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과 대학진학률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를 가졌는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률과의 상관관계 중 일부가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에 의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대학진학률은 정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대학진학률($\beta=1.766$),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617)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7) 본 분석모델은 시계열분석으로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인 경우는 Durbin-Watson D가 2.188,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는 2.026으로 두 경우 모두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청년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7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청년실업률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며($p < .001$), 청년실업률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97.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이 청년실업률($R^2=.810$)보다 청년실업률 증가율($R^2=.970$)을 좀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모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청년실업률 성장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beta = -.645$),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442$)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청년실업률			종속변수: 청년실업률 증가율		
	β (베타)	t	t유의도	β (베타)	t	t유의도
상수		-1.683	.123		-.756	.467
경제성장률	.211	.993	.344	-.645	-7.619	.000***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617	-3.142	.010**	-.442	-5.648	.000***
청년인구증가율	-.450	-1.753	.110	-.065	-.639	.537
청년층인구/핵심층인구	1.572	1.593	.142	.267	.680	.512
청년층임금/핵심층임금	.495	1.526	.158	.165	1.279	.230
대학진학률	1.766	3.129	.011*	.324	1.443	.180
시간추세	.195	.276	.788	.273	.969	.355
	$R^2=.810$ F유의도=.006			$R^2=.970$ F유의도=.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표 6>은 각 독립변수와 신규대졸자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인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추세만 신규대졸자 실업률에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추세는 신규대졸자 실업률과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추세가 클수록, 즉 학교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대졸자증가율 3개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대졸자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r = -.635$),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570), 신규대졸자 증가율(.513)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각 독립변수와 신규대졸자 실업률 및 실업률 증가율과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규대졸자 실업률		종속변수: 신규대졸자실업률 증가율	
	r(상관계수)	p(유의도)	r(상관계수)	p(유의도)
경제성장률	-.030	.906	-.635	.005**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400	.100	-.570	.014*
신규대졸자증가율	.172	.496	.513	.030*
대졸자인구/청년층인구	-.364	.137	-.197	.434
청년층임금/핵심층임금	-.190	.450	-.052	.837
대학진학률	-.227	.365	-.108	.671
시간추세	.473	.047*	.233	.35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모델에 의해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⁸⁾ 먼저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인 경우를 살펴보면, 회귀식은 신규대졸자 실업률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 < 0.01$), 신규대졸자 실업률을 예측하는데 79.4%(R^2)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청년인구 대비 대졸자 비율(대졸자 인구÷청년층 인구), 시간추세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이 높거나 시간추세가 클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beta=6.441$), 시간추세(5.067),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879)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회귀식은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 < 0.01$),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을 예측하는데 85.2%(R^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이 신규대졸자 실업률($R^2=.794$)보다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R^2=.852$)을 좀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신규대졸자 증가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부적으로 신규대졸자 증가율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경제성장률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지며 신규대졸자 증가율이 높을수록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신규대졸자 증가율($\beta=.523$), 경제성장률(-.444), 경제성장률의 고용탄력성(-.414)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본 분석모델은 시계열분석으로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신규대졸자 실업률인 경우는 Durbin-Watson D가 2.289,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인 경우는 2.188로 두 경우 모두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규대졸자 실업률			종속변수: 신규대졸자실업률 증가율		
	β(베타)	t	t유의도	β(베타)	t	t유의도
상수		.001	.999		-.836	.347
경제성장률	.346	1.529	.157	-.444	-2.317	.043*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879	-4.313	.002**	-.414	-2.399	.037*
신규대졸자증가율	.184	.835	.423	.523	2.797	.019*
대졸자인구/청년총인구	6.441	2.777	.020*	2.876	1.464	.174
청년층임금/핵심층임금	.468	1.325	.215	.355	1.186	.263
대학진학률	-2.028	-2.075	.065	-.885	-1.069	.310
시간추세	5.067	3.324	.008**	2.385	1.847	.095
	R ² =.794 F유의도=.008			R ² =.852 F유의도=.002		

주: *p<0.05, **p<0.01, ***p<0.001

4.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은 다른 국가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이원적 직업양성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편 등 청년층 실업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2002년 현재 외환위기 직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 대학설립 완화정책에 의해 대졸자가 급증해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으나 실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노동수요 측면인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인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노동공급적 요인과 청년임금에 관련된 요인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청년실업률에는 대학진학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청년

실업률 증가율에는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노동수요적 측면인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노동공급적 측면인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의 시간추세 등이 신규대졸자 실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대졸자 임금관련 요인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감소하며, 대졸자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신규대졸자 실업률에는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신규대졸자 실업률 증가율에는 신규대졸자 증가율,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이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노동수요 측면, 노동공급 측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1) 노동수요 측면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수요 확대와 관련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도 이와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노사화합, 토지가격 인하, 복지를 통한 소비진작, 이공계 활성화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노사화합은 한국기업의 해외이전을 억제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소강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사례는 노사화합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노사관계의 기념비적인 바세나르협약(Accord of Wassenaar)을 통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평화적·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켰으며, 이를 통해 1980년대 초의 심각한 실업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경제회복을 이루었다(최남호·최연우 역, 2003).⁹⁾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두 번째 요인으로 토지가격

9) 바세나르협약은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관계, 사회보장, 노동시장 세 가지 영역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즉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임금인상 억제, 노동유연성 인정, 일과 연계된 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화합을 통해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즉 한번 해고되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실직시 재취업 때까지 생계보장을 해줄 사회보장제도 미흡, 주택비·사교육비 과다로 인한 생계비 증가 등에 따른 불안심리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투쟁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노사화합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인하를 들 수 있다.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토지가격 인하는 기업의 시설투자 비용과 물류 및 보관비용을 인하시켜 생산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토지가격 인하는 주택비용, 농·공산물 가격 등의 인하를 유발해 근로자들의 생계비 저하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 번째 요인으로 소비진작을 들 수 있으며, 소비진작 정책으로는 빈부격차 해소, 청년실업자 지원,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등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소비계층의 소비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내수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 청년실업자 지원 등 복지를 통한 소비진작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마지막 요인으로 이공계의 활성화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꾸준히 개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경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를 선호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확대, 병역혜택 등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제도로 우수인력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공계 출신들이 노력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그들이 정부, 연구소, 기업 등 중요 조직의 핵심요직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¹⁰⁾

둘째,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직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산업별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를 제시해 주고 있다. 1998년 현재 산업별 대분류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82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34, 전력·가스·수도·건설 24, 제조업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분류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중 중 음식 및 숙박업, 제조업 중 소비재 업종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섭, 2003: 41-42). 또한 전병유·김혜원(2003)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 창출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고임금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환경 및 지불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활성화,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 부당하도급 근절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정상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

10) 중국의 경우 베이징대학, 칭화대학이 있는 베이징에 여의도 면적 12배 정도의 연구단지가 있고 정부 고위직의 다수가 이공계 출신인데, 한국의 경우는 서울대학 주변에 고시촌이 있고 사회의 주요 요직에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에서 이공계 출신이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으며, 미래의 기술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에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런 기회확대 지원, 임금 및 부가급여 향상을 위한 지원, 조기 주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최영섭, 2003: 122-124). 한편 노동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유한킴벌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무교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복지부문의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표 8>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원)

산업	1995	1998
농림·어업	91	82
광업	25	18
제조업	29	19
기초소재업종	19	11
조립가공업종	23	14
소비재업종	42	29
전력·가스·수도·건설	32	24
서비스업	43	34
음식 및 숙박	196	175

자료: 최영섭, 2003: 42.

(2) 노동공급 측면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에서 노동공급측 요인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와 실업률 완화정책도 다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9>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청년층(A)	4,476 (24.1)	4,922 (25.8)	4,847 (24.9)	4,751 (24.0)	4,733 (23.3)	4,705 (22.6)	4,605 (21.6)	4,508 (20.7)	4,267 (19.9)	4,138 (19.1)	4,101 (18.6)	4,030 (18.0)	3,977 (17.4)
핵심층(B)	11,593 (62.5)	11,814 (61.8)	12,123 (62.2)	12,455 (62.9)	12,847 (63.1)	13,210 (63.4)	13,629 (64.0)	14,043 (64.5)	14,023 (65.5)	14,289 (66.0)	14,692 (66.6)	15,007 (66.9)	15,349 (67.1)
노년층(C)	2,471 (13.3)	2,371 (12.4)	2,529 (13.0)	2,599 (13.1)	2,774 (13.6)	2,929 (14.1)	3,055 (14.4)	3,231 (14.8)	3,137 (14.6)	3,239 (15.0)	3,275 (14.8)	3,380 (15.1)	3,550 (15.5)
계	18,540	19,107	19,499	19,805	20,354	20,844	21,289	21,782	21,427	21,666	22,068	22,417	22,876
청년/핵심 (A/B)	38.6	41.7	40.0	38.2	36.8	35.6	33.8	32.1	30.4	29.0	27.9	26.9	25.9

주: 1) 청년층은 남자 15-29세, 여자 15-24세이며, 핵심층은 남자 30-54세, 여자 25-54세이고, 노년층은 남녀 모두 54세 이상인 자임.

2) 괄호 안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임.

자료: 통계청, 2003.

첫째, 청년실업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즉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같은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1991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해 왔으

며, 핵심층 대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도 1991년 이래 계속 감소해 왔다. 미래의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청년층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대졸자 실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된 직업을 잡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대학 설립 완화정책에 의해 많은 대학이 설립되면서 대졸자 수를 증가시켰으며, 대학교육이 개인의 인적자본 향상이나 소득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원낭비를 초래한 면이 없지 않다. 한편으로 대졸자가 증가하면서 고학력 자의 하향취업이 많아지고, 다른 한편으로 고학력으로 눈높이가 높아져 노동환경이 열악한 기업에는 취업을 꺼려 구직난과 실업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정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대졸자 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측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핵심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이 높다는 점, 대학진학을 증가, 시간추세가 청년층 및 신규대졸자 실업률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점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 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청년층 및 신규대졸자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줄 정책은 학교교육과정 개선과 학교졸업 후 취업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진학을 위해 일반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고등학교체계에 미국의 종합고등학교와 같이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¹¹⁾ 또한 직업교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디자인, 자동차, 요리, 원예, 제과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학교-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현장실습 강화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과 자격증 제도의 연계 프로그램 도입, 직업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간의 차별을 완화하는 기업의 경영시스템 도입, 중·고등학교에

11) 현재 한국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들, 일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거나 이수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도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고등학교 도입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줄 것이다. 한편 직업교육제도는 독일의 직업양성교육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제도라고 평가되지만 독일의 제도는 중세의 도제제도로부터 오랜 과정을 거쳐 발달되어 온 것으로 그러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갖지 않은 한국에 도입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좀더 적응력이 높은 미국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미국도 1970-1980년대에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역사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의 직업진로교육의 활성화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채구복, 2001: 267-269).

학교교육과정의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대학교육을 전문인력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질 높은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시설의 확충, 교수진 확보 등 대학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초과하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측도 정원미달 등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원된 교수를 채용하지 않아 심도 있는 전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부제 등 모집단위 광역화가 추진되고 적절한 진로지도가 결여된 상태에서 복수전공을 한 학생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들이 학점취득이 용이한 과목위주로 수업을 받게되어 심도 있는 전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몇 개 대학을 연합대학 체제로 구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학생수 대비 일정 수 이상 전공교수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¹²⁾ 광역단위 모집화가 불필요한 경우 전공위주로 모집하는 제도, 전공 및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의 직업상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제시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전공분야 정원을 장래의 노동수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순수과학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연구소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요구가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기적 관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산학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학과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산업이 육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광역단위로 산학연계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에 산업을 육성하는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졸업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영국의 뉴딜(New Deal)과 같이 청년실업문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사업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입안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청년층이 쉽고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앞으로는 부처별 실업대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고 개별 프로그램들을 정합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최영섭, 2003: 95). 한편 종합적인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첫째 개인별로 청년실업자의 요구, 강점과 약점,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접수에서 취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뉴딜과 같은 단계적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¹³⁾ 둘째, 청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12)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재정지원 방안'으로 2006년부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을 '후기 두뇌한국 2I'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하며, 교수 1인당 학생수 기준을 해마다 1명씩 줄여나가 2010년에는 36명 이하의 대학만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한겨레, 2004b).

13) 뉴딜프로그램은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구상으로 1998년 4월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정책이다. 뉴딜프로그램은 도입단계(Gateway), 뉴딜옵션(New Deal Options), 사후관리서비스(Follow-through)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도입단계는 최장 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개별상담가는 참여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는데 주력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실패하면 참여자

록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층 및 기업들이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곽상경. 2003. 『계량경제학』. 다산출판사.
- 교육인적자원부. 1991-2003. 『교육통계연보』.
- 남재량. 2002. “청년실업과 대졸자 실업”.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대한상공회의소, 9월 14일): 77-101.
- 노동부. 1985-1991.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1992-200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 1996-2003. 『노동통계연감』.
- 문교부. 1985-1990. 『문교통계연보』.
- 안주엽. 2003. “노동공급”.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17-255.
- 이규용·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3.
- 이병희. 2001. “최근 국내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경제정책연구』 3(4): 47-93.
- . 2003.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매월노동동향』 28(11월호): 53-66.
- 이병희·안주엽. 2001.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 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용석 역. 2003.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Niall O'Higgins. 2003.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병유. 2002. “청년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청년실업의 실태와 극복방안』. 제1회 GYF 포럼 자료집(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월 17일): 8-47.
- 전병유·김혜원. 2003. 『디지털 경제와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 전재식. 2002. “청년층 실업과 정책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5(1): 1-9.
- 조우현. 1998. 『노동경제학』. 법문사.
- 채구묵. 2001. “독일과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복지연구』 17: 245-279.
- . 2003. “비정규근로자의 인구학적 및 직업·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58: 276-310.
- 채창균. 2001. “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4(2): 1-25.
- 최남호·최연우 역. 2003. 『네덜란드의 기적』. Jelle Visser and Anton Hemerijck. 1999. *A Dutch Miracle*. 도서출판 따님.
- 최영섭. 2003.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통계청. 1985-2002. 『한국통계연감』.

의 특성에 적합한 뉴딜옵션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② 옵션단계는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선택된 뉴딜옵션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옵션은 크게 임금보조 취업, 자원봉사활동, 환경감시단활동, 전일제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기간동안 참여자는 개별상담가와 계속 연락하도록 하고, 주중 하루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사후관리서비스 단계에서는 뉴딜옵션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개별상담가와 면담하여 다시 뉴딜옵션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구직급여가 연장된다(이병희 외, 2002: 117-119; 채구묵, 2003: 306-307).

- .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겨레. 2004a. “청년실업 3년 만에 9%대 넘었다”. 3월 19일자.
- . 2004b. “교수당 학생수 40명 초과 대학 2006년부터 정부지원 중단”. 7월 2일자.
- 한국노동연구원. 2003. 『2003 KLI 노동통계』. 거목정보산업(주).
- . 2004. 『세계 각국의 사회협약』. 이환기획.
- 한승준. 2003.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1): 85-109.
- 황준옥. 2003. 『미국·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Acemoglu, D. and J. S. Pischke. 1998. “Why Do Firms Train? Theory and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1): 79-119.
- Behrens, Martina and Karen Evans. 2002. “Taking Control of Their Lives? A Comparison of the Experiences of Unemployed Young Adults(18-25) in England and the New Germany”. *Comparative Education* 38(1): 17-37.
- Blanchflower, D. G. and R. B. Freeman. 1996. “Growing into Work: Youth and the Labor Market over the 1980s and 1990s”. pp. 109-159 in *OECD Employment Outlook*, edited by OECD. Paris: OECD.
- Groth, Claus (ed.). 2001. *Strategies Against Youth Unemploy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eter Lang Pub.
- Korenman, S. and D. Neumark. 1997. *Cohort Crowding and Youth Labor Markets: A Cross-national Analysi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Working Paper No. 6031. Cambridge, Massachusetts.
- Levin, Henry. M. 1983. “Youth Unemployment and Its Educational Consequence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5(2): 231-247.
- Lynch, L. M. and R. Richardson. 1982. “Unemployment of Young Workers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0: 362-371.
- Makeham, P. 1980. *Youth Unemployment*. Department of Employment Research Paper No. 10. London: HMSO.
- Marsden, David and Paul Ryan. 1986. “Where Do Young Workers Work? Youth Unemployment by Industry in Various European Economie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4(1): 83-102.
- Neumark, D. and W. Wascher. 1992.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and Subminimum Wages: Panel Data on State Minimum Wage Law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6(1): 55-81.
- O’Higgins, Niall. 2001.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Geneva: ILO.
- OECD. 1995-2003.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Petersen, Anne. C. and Jeylan T. Mortimer (eds.). 1994. *Youth Unemployment and Society*.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Raffe, D. 1985. *Youth Unemployment in the UK 1979-84*. Edinburgh: Centre for Educational Sociology.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Chai, Goo-Mook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and seeks some assignments for mitigating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rapidly increased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slowly decreased after 2000, but was still somewhat higher in 2002 than that before the IMF. Seco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rate, which rapidly increased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slowly decreased after 2000 and became a similar level to that before the IMF economic crisis, but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new college graduates highly increased after the IMF. Third,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youth unemployment shows that economic growth and the employment elasticity of economic growth negatively affec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rate of entrance into colleges positively affects the unemployment rate. Fourth,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demonstrates that economic growth and the employment elasticity of economic growth negatively affec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new college graduates, the college graduate/youth population ratio, and the time trend positively affect the unemployment rate.

Thes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s. First, in order to increase labor demand, emphasis must be placed on preparing economic conditions which can raise economic growth rate and on fostering industries and occupations which have high employment elasticity. Second, in the aspect of labor suppl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new college graduates corresponding to labor demands in industries. Third, in order to redress the mismatch between the demand and the supply of the youth labor marke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emedying educational systems such as the activ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 reformation of college education to match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in colleges and the skills requirements of the world of work, and preparing a unified program to support the youth unemployed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Key words: youth unemployment,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접수일 2004. 4. 24. 게재확정일 2004. 7. 16.]